

1946년 10월 26일 창간 | 제 2898호

Honam Shinmun

2020년 4월 1일 (음력 3월 9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총괄본부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 위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합당 제공

## 여야 재난지원금 공방 속 표심잡기 본격화

민주당 “코로나19 방역·경제위기 극복 총력 전개”

통합당 “1회성 펴주기 반대…경제 실정 심판해야”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31일 각각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빠른 전달을 위한 ‘2차 추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질하는 여당론’을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맞서 1회성 지원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진정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실정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통합당 간 비례정당 선거운동 대결도 본격화됐다. 특히 친문(친 문재인) 세력의 열린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개혁’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은 선긋기를

했고 통합당은 공세를 펴부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용 지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이른바 ‘정부 지원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운동보다 국민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국민에게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달되도록 선거 중에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자 노력했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감안해 조정했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경기도 수원을 시작으로 제주(3일), 부산(6일), 광주(8일), 대전(10일)을 돌면서 선거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1일에는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석회의를 갖고 2일에는 시민당과 공동 출정식도 가질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회성 묻지마 지원으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데도 총선 표심을 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선거전략회의에서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명확히 총선을 겨냥한 대표 유행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라면서 “나라 살림만 죽내는 1회성 지원 정책을 반대하지만, 만일 주겠다면 편을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고 밝혔다.

전날 2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지원 패키지 공약을 내놓은 통합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처방은 경제 실정 심판이라는 점도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제는 추락 할 데까지 추락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 다시는 이런 나라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심”이라고 고집했다.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통합당과의 공동 선거 운동을 본격화했다. 김경식 기자

## 전국 소방공무원 5만2천516명 오늘부터 국가직 신분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원화된 4740여명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부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천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소방 공무원 현원 5만3천188명 가운데 98.7%에 해당한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

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지난 2011년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8년여만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는 물론 소방안전 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업무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정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지자체별 소방 투자 격차 등 문제를 해소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도 경계와

관할지역 구분 없이 현장과 가까운 소방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직 전환에 맞춰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광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지난해 말 마련해 추진 중이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한다.

조인호 기자

## “코로나19 고통 분담”

시의원, 월정수당 25% 기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을 나누고 사상 초유의 감염병 국가 재난사태의 빠른 극복을 위해 기부운동에 동참했다.

광주시의회는 소속 의원 23명 전원이 월정수당의 25%를 자발적으로 모금해 이 중 1천150만원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기탁하고, 나머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마스크 5천장을 구매해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분들과 대구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기부에 동참했다”면서 “모두가 힘든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범 기자

##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원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월부터 부분·사업별로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부의 선지급 계획 결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2만1천8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원이다. 3월분 선지급액은 총 56억7300여 만원이다.

선지급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지급하며, 선지급한 활동비는 사업 재개 시 월 활동시간을 확대해 정산하기로 했다.

또한 선지급을 희망하지 않는 참여자도 미지급된 활동비를 사업 재개 후 참여시 간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각 자치구 및 수행기관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참여 노인에게 선지급 등으로 접수 및 지급안내 등 후속 절차를 이메일, 팩스,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 ▣ 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